

미리 본 잠룡 기상도… 이낙연 ‘맑음’, 황교안 ‘먹구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대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선두였던 황교안, 이낙연에 밀려
이낙연 21.2%, 황교안 20.0%

문재인 대통령의 바톤을 이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선두를 달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 총리는 꾸준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름을 올렸으나 선두를 달린 것은 이번 여론조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5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 p·응답률 4.4%)'를 조사한 결과, 이 총리의 선호도는 21.2%로 선두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20.0%)·이재명 경기도지사(9.3%)·김경수 경남도지사(6.2%)·박원순 서울시장(5.3%)이 이 총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리의 뒤를 이었다.

이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주목 할 점은 이 총리의 선호도라는 게 정계 종론이다.

리얼미터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작년 11월부터 시작했고 그간 선두는 황 대표가 유지했었다. 대권주자 지형

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황 대표 체제는 처음 컨벤션 효과 때문에 기대치가 있었으나 서서히 빠져가고 있다"며 "(이유는) 사실상 공

안검사 하다가 탄핵돼서 퇴출당한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했다는 게 대권주자로서의 스펙이 저는 안 된다고 본다"

고 진단했다. 이어 "똑같은 총리 출신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 총리는 4선 의원에 도지사를 낸 사람"이라며 "정치적 이력에서 (황 대표가 이 총리와) 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컨벤션 효과는 전당대회 등 정치 이벤트에서 주목받은 정치인 또는 정당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다.

정두언 전 국회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황 대표는) 그동안 너무 쉽게 (정계) 데뷔를 해서 순탄하게 가다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실언이나 문제들이 발생해 지지율에도 변화가 생겼다"며 "(차기 대선주자) 1위를 유지하다가 2위로 순위도 바뀌고 이러니까 뭔가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최근

아들 취업 특혜 논란을 비롯해 한국당 여성당원 엉덩이춤 논란 등 구설수를 직면했었다.

아울러 이 총리가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두를 달리자 그가 과거에 언급한 대망론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총리는 작년 10월4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본인을 향한 대망론 관련 "어리둥절하다.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여론조사를 하나 싶다"고 했다. 이어 "(대망론이) 나쁠 것까진 없으나 조심스럽다. 현재 맡고 있는 일도 힘에 부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총리에게 선두 자리를 내준 황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만 바라보고 하겠다"며 "진정성을 갖고 나라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이 사랑과 신뢰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metroseoul.co.kr

야권 달래기 나선 이인영… 野 “공감 못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보·보수 혁신 등 공존정치 강조



6월 임시국회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격 시작한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존'을 강조하며 야권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보수 정당은 물론 범여권도 "공감할 수 없다"며 일제히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존의 정치는 세 가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원내대표의 연설은 한 마디로 정의당 비위 맞추기 이자 북한 눈치보기, 경제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의 일관"이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자는 국민 60%의 목소리보다 제 밤그릇 행적이라는 정의당의 생떼가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맹목적 평화예찬론을 앞세웠다"고 지적했고, 경제 부문 연설에 대해선 "반성과 현실적 대안 제시는 없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자는 총론에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며 상시 국회체제·국민소환제 도입 역시 검토할 제안"이라면서도 "야당이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고 실정·파국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소주성·최저임금 등의 실책이 빚어낸 경제 어려움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민주당의 병 주고 약 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의 연설이 공존은 있지만, 공감은 없다는 평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존을 강조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개혁정부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수석대변인은 "우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느냐가 첫 번째 시금석이 될 것이고, 8월 말까지 합리적이고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선거법 수정법의안을 만들어내느냐가 두 번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썩 와 닿지는 않았다"며 "개혁의지와 구체성이 없는 말잔치"라고 평가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여야 4당이 협치를 통해 어렵사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게 최우선이고, 특위 연장은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20대 국회 내내 보여준 모습에서 정치개혁을 비롯한 개혁의지를 보이지 못한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한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충섭 목사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文 “남북 하나되는 과정, 앞장서 주시길”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오찬간담회
“통합정치 위한 역할 해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 자리에서 기독교에 바라는 점을 밝혀 종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진행된 이번 오찬에는 김성복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김충섭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김필수 사관(한국구세군)·박종철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서익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림형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유낙준 주교(대한성공회)·이승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주훈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전명구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홍동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 때 "저는 기독교에 바라는 점이 좀 더 있다"며 "지금 까지 해온 그런 역할에 더해서 첫째, 평화를 위한 그런 역할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남북 간에 동질성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과정에 우리 기독교계가 좀 더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 때 "저는 기독교에 바라는 점이 좀 더 있다"며 "지금

까지 해온 그런 역할에 더해서 첫째, 평화를 위한 그런 역할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남북 간에 동질성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과정에 우리 기독교계가 좀 더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이라며 "정치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만 정치가 스스로 통합의 정치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종교계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더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당부함과 동시에 "우리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 또 영향력이 아주 크다. 교인들 수가 많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기독교가 해왔던 역할이 그만큼 컸다"고 했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후 이승희 목사는 한국교회 대표자 발언으로 "아시는 대로 저희 개신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교회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 원칙이 정부와 교회 간에 서로 잘 협력되고, 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목사는 그러면서 "저희 한교총은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 대통령도 말했듯 나눠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일에 정부와 교회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정부 “日 수출규제는 GATT 위반”… WTO 제소 실무작업

정부가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WTO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일본에 대해 극적 역전승을 거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와 통상법무기획과 등을 중심으로 WTO에 제소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당장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 정부 통상 당국자는 "지금 일본의 행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를 위배한 것으로 본

다"면서 "GATT 제11조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경우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GATT 제11조는 수입·수출에서 수량 제한 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지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